

중국의 임금 상승

'세계공장' 시대 막 내리나?(3)

글 : LGERI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 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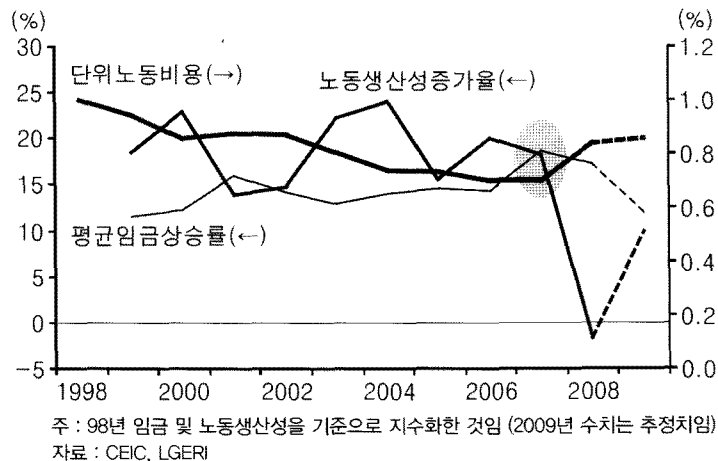
최근 중국 노동시장은 잇따른 파업 사태와 임금 인상 파동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폭스콘 중국 선전공장의 연쇄 자살 사건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 착취와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 임금 수준의 불합리함을 성토했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폭스콘이 급기야 기본급을 9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122% 상향 조정하는데 이어, 일본 혼다차 포산 공장도 34% 인상안을 타결해 사태를 진정

시켰지만 선두기업 임금 인상에 따른 '양떼효과' 우려는 가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임금 인상의 물결이 확산되는 와중에 올 들어 14개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이 평균 20% 급등했다. 중국 저임금 시대의 종언이 현실화 되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생산기지를 아예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으로서 누렸던 '봄날' 은 간 것인가?

● Ⅲ. 임금 상승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

1. 인플레이 압력 제한적이나 기업 경영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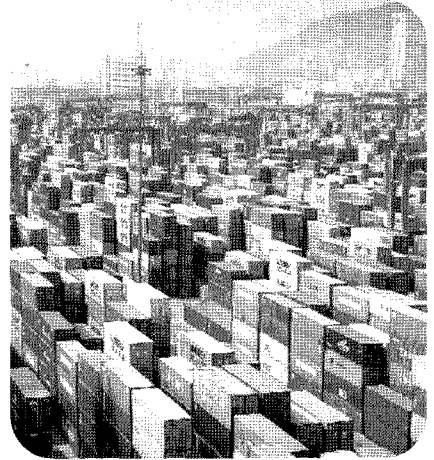
임금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중국 내의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되거나 중국 수출제품 가격 상승으로 폴디락스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만 가지고 실제로 경제와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도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15%씩 급증해왔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평균상승률은 1.8%에 그쳤고 제조업의 이윤증가율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의 평균증가율이 16.9%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위노동비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런 관점에서 2007년의 중국 임금에 따른 기업부담이 오히려 200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생산성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다가 2008년에 노동생산성을 역전한 모습을 보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중국 단위노동비용 추이(%)

2008년 중국 노동생산성의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고용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증가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2009년에 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더라도 중국정부의 강력한 임금 인상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고도성장기 경험을 살펴보면, 일본은 1965~75년의 제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이 15.6%, 한국도 1989~96년엔 7.8%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과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모두 생산성을 넘어섰으므로 CPI가 7% 이상 치솟았다. 중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당시의 한국과 일본보다 월등히 높고, 지금까지의 교육 및 과학기술 수준이 낮지만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향후 생산성 상승 여력도 비교적 크다.



이런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을 초월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시의 한국과 일본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표 1) 참조).

향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국가별 경제 고속성장기간 주요 경제지표(%)

	GDP 성장률	제조업 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CPI
일본(1965~75)	7.6	15.6	6.73	7.7
한국(1989~96)	7.8	7.0	5.7	7.6
중국 (2001~09)	10.1	13.2	16.4	2.0

자료 : 각국 통계청

중국 제조업의 경우 각 제조단계의 원자재와 부품 가격에 포함된 노동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최종소비품 가격에서 노동비용이 대략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만약 5%의 노동비용 상승이 모두 최종소비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제품가격이 1.2% 상승할 수 있다. 공업용품 가격이 CPI 구성에서 약 30%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는 0.4%p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내에서 많은 산업이 생산능력과잉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임금상승으로 제품원가가 올라가더라도 공급과잉으로 비용증가분을 모두 하류업체 및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즉,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순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2. 산업별 명암 엇갈릴 전망

중국 임금 상승에 따라 산업간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상승의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저임을 이용해 생산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생존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중국의 산업연관표(2007)를 통해 각 산업의 노동비용 비중(노동비용/생산총액)을 계산한 결과 1차 산업 56%, 2차 산업 8%, 3차 산업 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1, 3차 산업이 2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라는 의미이다. 세부 산업을 보면 의류, 가구 등 제조업과 금융, 교육 등 일부 서비스업의 노동비용이 높은 반면 화학공업, 전자기기 등 업종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임금상승은 무역불균형 해소, 산업고도화 등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임금 상승은 소비, 생산, 제품 가격 등 여러 측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산업과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수혜자가 대부분 서민계층이기 때문에 식료품, 소매유통업, 의류 등 기초부문의 소비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편, 소비수요증가 및 소득증대에 따른 저축확대가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자극하고, 생산원가가 올라가면서 최종제품가격도 높아진다. 주요산업의 소비, 생산 및 이윤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임금이 20% 상승할 경우 전자기기 부문의 수요 확대 효과보다 제품 가격 상승 효과가 더 커 이윤이 7.3% 하락하는 반면 화학공업의 경우 제품가격 상승효과보다 수요 및 생산확대 효과가 더 두드러져 이윤의 하락폭이 0.16%에 불과하다(표 2 참조). 기업의 이윤은 시장 수급관계, 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어 같은 업종인데도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내수시장 확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 노동비용이 낮은 업체가 그 덕을 볼 수 있다.

중국 가전산업의 경우 노동비용이 생산원가의 7%, LCD와 에어컨의 경우 5%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임금이 15% 상승할 경우 제품 가격이 약 2%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농민공 소득의 15% 상승으로 가전하향(정부가 13% 보조금 지급)과 맞먹는 시장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에게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 임금상승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임금 20% 상승할 경우)

	노동비용계수	소비(%)	Output (%)	제품가격(%)	이윤 (%)
석유가공	0.05	0.46	5.96	5.72	-8.6
금융	0.18	2.73	6.89	5.56	-2.6
소매	0.15	4.80	8.48	5.46	-2.9
섬유의류	0.10	3.51	5.37	8.92	-14.1
교통운송	0.12	2.46	8.06	6.84	-3.1
건축	0.12	0.58	1.24	7.3	-17.8
부동산	0.09	4.69	5.9	2.9	-3.3
화학공업	0.06	1.46	19.49	6.7	-0.16
전기전자	0.06	1.2	6.69	6.54	-7.31

자료 : 중국 申銀万国 증권 리서치센터 (SWS) 2010.7(노동비용 상승이 기업의 이윤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3.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가속될 전망

임금상승은 양날의 칼 과 같다. 구매력 향상에 따른 수입증가가 무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가속시킬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임금수준이 상대적 저렴한 내륙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중국으로서 희망하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상승이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 수출가격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것을 경제구조전환의 대가라고 각오하고 있는 듯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임금=경쟁력'이라는 공식을 깨고 한 차원 높은 경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임에만 의존하던 기업이 물리간 자리에 기술경쟁력이 더 높은 기업들이 자리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산업고도화와 소비영향력의 확대과정이 바로 수출증가를 둔화와 고도성장 감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적절한 속도조정이 관건이다. 한편, 중국 수출품목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경합도가 높아지고 수출 분야의 경쟁격화가 예상된다.

● IV. 시사점 : 철수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저비용 생산기지로의 우위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뿐만 아니라 도시화 등, 수요 증가로 토지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위안화 환율도 2015년까지 15%안팎 추가 절상될 전망이다. 생산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인 업종은 생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반면 LCD, 자동차 등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업종의 경우 기계설비

확충 등 생산성 제고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국 내륙으로 이전하려는 외국인투자자가 많아지면서 2000년에 12%에 불과했던 중서부 지역의 FDI 비중이 2009년에 30%를 넘었다. 인텔은 상하이 공장을 쓰촨성 청두로 옮겼고, HP는 충칭에 노트북 수출제조단지를 설립했다. 한편, 미국 패션업체 코치(Couch)는 아예 중국을 떠나 인도나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길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내



륙지역의 임금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동부연해 지역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지금 당장은 문제없지만 몇 년 뒤에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동남아로 떠났다가 원부자재 조달 문제 등으로 다시 중국 연해지역으로 유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고부가가치와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으로 떠오른 데는 인건비 이외에도 대체 생산지로 거론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임금인상이 외자유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인건비만 바라보는 기업은 더 이상 중국의 외자유치 대상이 아니며,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FTA 등 제도적 환경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생산지로서의 진정한 남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발을 생산하는 데에는 벽차겠지만 반도체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에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즉,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을 통해 높아진 임금수준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중국의 임금 상승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노동비용이 일부 기업의 순익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지갑이 두툼해지면서 소비재를 수출하거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보는 시각과 대응전략에 따라 '제2의 골드러시'를 구가할 수도 있는 반면, 퇴출의 운명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서둘러 이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